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
----------	------

발의연월일 : 2024. 7. 22.

발 의 자 : 장경태 · 김동아 · 김용민  
모경종 · 민병덕 · 박홍배  
강준현 · 김문수 · 황운하  
김현정 · 김승원 · 이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당에는 100명을”을 “중앙당에는 200명을”로 하고, “시·도당에는 총 100인”을 “시·도당에는 총 200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정책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정책연구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 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② 국가는 <u>정책연구소</u>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u>-----.</p>
--	--